

사 설

‘大圓’ 정신 대중속에 꽃피워야

(재)대한불교 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어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여법한 기념식을 한다고 발표했다. 벌써 성년이 되었다니 진흥원이 그동안 벌여온 활동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1975년 7월 7일 (주)동국제강의 창업주인 大圓 장경호거사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당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제 30여6 천민원을 불교진흥을 위해 써 준다면 더 없는 영광이란 내용이였다.

당시 불교계는 해방이후 지속된 비구와 대처의 분점으로 혼란속에 빠져 있었으며, 교단에 대한 불충도 구심점도 없었다.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가 비구와 대처의 처절한 대립이였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장경호거사는 이런 상황을 더없이 안타깝게 생각했음은 물론이다. 종파나 주의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의 참화와 불인의 공포’에 떨고 있고 인간성을 상실하여 정신적 갈등에 빠져 있으며, 불순한 사상으로 사회가 혼란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이 시대에 불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역할이라고 보았다.

이런 장경호거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75년 8월 16일 문화공보부에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진흥원은 설립 이래 군포교직원들 비롯 각종 불교단체에 대한 행사 및 운영비 지원,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연수 지원, 불교문화센터 및 다보법회의 운영, 불서의 발행 및 보급, 수련원 건설, 불교방송 지원 등 숭한 일을 해왔다. 이 중에서도 군포교화살과 지원과 불교방송 지원은 진흥원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리라 본다. 특히 불교방송의 경우 설립과정에서 이후 재정적 지원까지 진흥원의 역할이 지중했으며, 그것은 고 장경호거사의 원력에서 비롯되었

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이 그동안 순탄한 행진을 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진흥원의 행보가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운영도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심지어는 진흥원이 조계종의 재산이며, 마땅히 종단 산하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강경론자도 있었다. 모두 지나친 감이 있으나 타산지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이제 성년이 된 진흥원을 보면서 몇가지 교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진흥원은 초종파적 입장에서 한국 불교가 중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던 현실 타개를 위한 적극적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방의 2세 계를 맞이하여 예상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포교전략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불교운동 전개 내지 불교운동가의 관리와 양성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흥원 전반에 대한 개방과 조직적 활동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거듭나기 필요하다. 또한 진흥원이 어느 특정한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불자의 재산이란 점을 인식하고 진흥원의 사업에 적극 후원 내지 동참하는 것이 양심있는 불자들의 의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20년전 장경호거사는 불자가 된 것을 가장 행복한 일 중의 하나로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산중 중심의 의식과 기복에 치우친 소극적 관념적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 갈등에서 해방은 현대인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정면 행복하고 멋진 사나이였음이 분명하다.

이제는 그분의 정신이 꽃피도록 하는 점에서 향후 진흥원의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열린마당

전사법 개정

종단에서는 민족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불교 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실이 안되게 관리·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전사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불교재산처분 종단승인’ 조항은 주지의 사찰재산 임의 처분을 막자는 것이다. 과거 불재법에서는 매 회계년도 예산 및 결산서·재산증감에 대해 정부에 신고 종단대표 및 신임주지등록 등 자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폐기되었다. 전사법 개정이 불재법으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 전사법 규정에 경내지부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처분시 소속종단대



법등스님

“사찰재산처분 관리강화로 삼보정재 유실 막아야”

표의 승인을 얻도록 해 종단대표의 승인을 문제부 장관과 동등하게 했다. 추진중인 전사법 개정에는 분규사찰의 재산 관리인 임명조항 폐지,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사사지복원 등 중요요인이 들어있다. 전통사찰위원회 설치의 전 통사찰 지정 및 각종 처분을 문제부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결의에 따라 허가를 내리는 것으로 전통사찰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회를 제도화 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현재의 농지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절대 농지로서의 구실을 상실한 곳을 문화재 보호와 사찰 경관 보존 차원에서 매입하려고 해도 취득할 수 없다. 농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곳은 사찰 경내지 보호 차원에서 취득할 수 있게 농지취득특별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조계종 현안문제해결대책위 위원〉

종단현안문제해결대책위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는 한마디로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불재법’이 종단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일부 본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불교재산관리법’을 약법으로 규정하고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종단 재산을 관리·운영해 왔다. 종단재산의 관리·운영권을 권력에 위임하고서라도 종단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지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딜레마중



침 화스님

“정치적 예측 벗어나 자율적 감시제도 마련”

의 하나다. 이번에 특히 눈점이 되고 있는 ‘사찰 경외지’마저 문제부장관에 처분권이 맡겨질 경우 불교계는 정치적 예측은 물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불교자주화의 시각에서 전사법 문제를 다뤄야 한다. 법적 구속력과 정부권력에 의지해서 전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불교계 내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자율적 제도장치 속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문제와 관련해 당사 주지가 잘못했을 경우 본사 주지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볼만 하다.

서로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와 불교자주화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종단의 백년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경외지 재산처분 종단대표승인 명문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시안 내용

조계종 현안문제해결대책위(위원장 침화스님)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법(전사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법위는 △사찰의 재산보호 및 종단의 자율성 강화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사사지 복원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축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찬반 양론을 격화시키고 있는 조항이 제6조. 현 조항은 경내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처분에 대해 문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시안은 경내지부의 동산

등도 중요 개정시안으로 들어 있다.

불재법은 87년 11월 폐지될 때까지 수입지출·재산 증감과 인사행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감독과 개입을 받아야 해 대표적인 약법으로 지탄받았다. 그러나 불재법은 당시 정국에서는 혼란기에서 불교계 스스로 자초한 입법이며 이것 때문에 불교 재산이 이나마 남아있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안대책위는 보다 합리적이고 불교계의 이익을 위한 전사법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속〉

시론

‘空約’으로 끝낼 것인가

우선 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이란 것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화려한 수식어로 늘어놓는 공약이란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우선 유권자를 현혹하여 표를 얻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다.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기독교 편향성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여러번 분노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그가 집권하고부터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형사고들이 청와대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형편이 이런 정도이니 김영삼대통령이 불교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현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할만한 불교정책을 세워주고 추진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불교계에도 문제는 있다. 앞으로도 여러 선거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선거가 있으면 정치인의 공약도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계에서도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불교 발전과 민족문화로서의 불교문화 창달에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불교계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알려 주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주장이 뚜렷해야 그것을 관철시키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계가 집단이기주의나 불교자체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치권에 불교정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다 큰 안목으로 불교가 민족사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실시해 주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집권후반기를 맞는 지난 달 25일 “오늘부터 2년 6개월의 임기를 새로 취임하는 각오로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다짐을 보였다.

불교가 현재 민족문화의 살아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김영삼대통령이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따라서 이 민족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공약이행을 비롯한 불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요구한다. 그렇게 불교와 관련된 정책은 중요함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반을 넘긴 현재 불교방송 지방망 허가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약도 불자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불교계 자체의 준비부족 같은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불교중앙위원회는 불교계의 준비도 전무하고 정부의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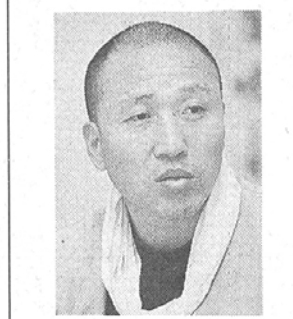
민족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 또는 민족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찰토지는 영구보존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종토세 토초세를 매기고 있다. 이것은 위험사황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때 사찰의 종토세 토초세 면세 공약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교계 여건조성 선행돼야

생각해 보라. 불국사나 해인사가 토함산이나 가야산에 있다고 그 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내어야 되겠는가. 반드시 내야 한다면 그것은 사찰에서보다 우리 국민전체가 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전사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 총무원에 갔었다. 많은 스님들이 모였는데 개정을 하지는 의견과 하지말자는 의견 등이 팽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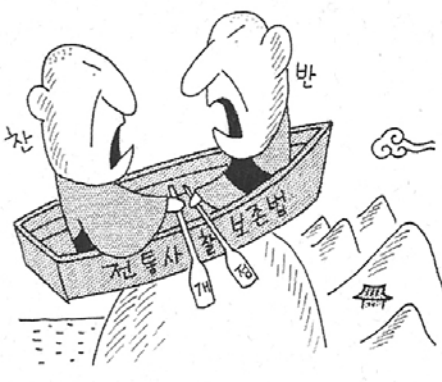
물론 이날 회의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회의였지만 전사법 개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차에 보다 양백을 기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도 불교의 자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차례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리지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계가 집단이기주의나 불교자체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치권에 불교정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다 큰 안목으로 불교가 민족사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실시해 주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효 림

〈피주 보광사 주지〉

현대만평



양보가 없는 한...

진정한 참회는 성불로 이어집니다

고불산 성곡사 대불 및 천불 집안·회향식

대참회도량 공주 고불산 성곡사에서는 높이 18M에 이르는 석가모니 청동대불과 등신불(190Cm) 크기의 1천 부처님을 모신 노천 천불전을 조성하고 집안 및 회향식을 갖게합니다. 10여 년의 기도와 원력으로 이루어진 불사가 완성되는 거룩한 자리에 모든 불자법을 초청 하오니 정열한 불사의 회향식에 꼭 참석하시어 무량 복덕의 복전을 함께 지으시기 바랍니다.

회 주례 정 봉행위원장 지명 성곡사주지 관 록 합장

천불 대참회 도량 공주 고불산 성곡사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방문리 산2번지 전화:(0416)53-3355 정암사(서울포교당)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41-49 전화:(02)683-3993

집안·회향식:1995년 9월 17일(일) 오전10시

행사 당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성곡사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천불전에 모실 아광여래불(1불당 1인원) 접수도 받으시 동참을 바랍니다.